



7500만원 집 잡히고 월 9만2천원 수령 주택연금 노인 울린다

“생활비도 안돼” 광주·전남 가입 포기 잇따라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수령액이 담뱃값도 안돼서 한숨만 나옵니다.”

7천500만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K(60·순천)씨는 요즘 크게 후회하고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9만 2천원에 그쳐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다.

광주·전남에 K씨처럼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가 수령액이 적어 후회하거나 가입을 포기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담보로 잡힌 집의 가치가 낮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3분의 1수준에 그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4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전남 지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들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주택연금’(역 모기지론) 가입이 크게 늘고 있으나, 광주·전남 가입자들의 수령액은 수도권의 3분의 1수준이다. 실제 서울지역 가입자들의 월 평균 지급액은 128만8천원이고 경기지역은 108만5천원으로 100만원대를 훌쩍 넘긴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각각 37만 9천원, 34만2천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반면 인천은 71만원, 부산 68만6천원, 대전 62만원, 제주 59만4천원, 대구 59만1천원, 경북 56만9천원, 울산 50만2천원, 경남 47만5천원, 충남 47만2천원, 강원 43만5천원, 전북 41만8천원, 충북 34만5천원 등이다.

가입자 수도 전체 2천334명 중 수도권이 1천833명(서울 871명, 경기 845명, 인천 117명)으로 78.5%에 달한다. 광주는 50명, 전남은 13명에 그쳤다.

이는 광주·전남의 집값이 수도권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 담보로 맡겨진 집값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가구당 평균 3억4천600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광주는 9천300만원, 전남은 1억 8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집을 담보한 연금 수입액도 쥐꼬리만큼 불과해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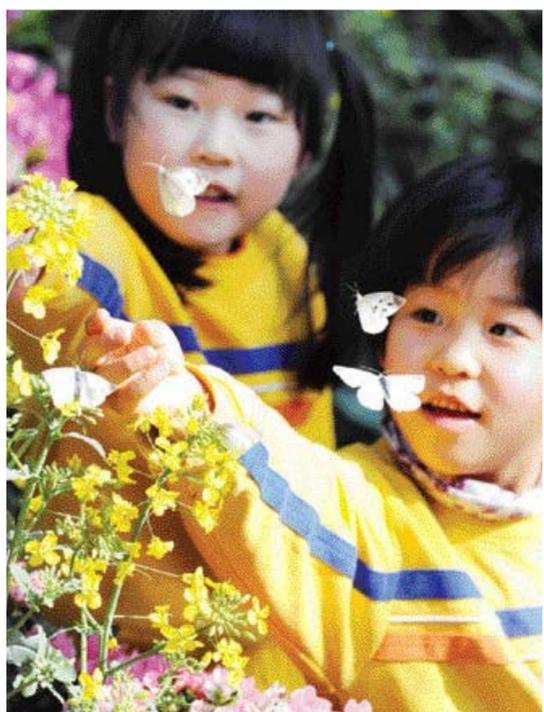
되자, 노인들이 가입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경기 성남의 80대는 8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맡기고 매달 436만3천원을 받고 있으나, 순천에 사는 60대는 7천500만원짜리 아파트를 잡히고 월 9만2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 광주·전남지사 관계자는 “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연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령액은 천차만별이다”며 “광주·전남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방식이다.

낮은 것은 주택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나비...꽃...동심... 봄이 왔네

임춘(立春) 날들이에 나신 유치원생들이 4일 오후 함평자연생태공원에서 나비를 날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함평군은 이날 어린이들과 함께 2013년 함평 엑스포 승인과 나비축제 성공을 기원하며 호랑나비와 산호랑나비, 배추흰나비 등 2013마리의 나비를 날려 보냈다. /함평=최현배기자 choi@

여야가 광주 등 광역시의 자치구를 행정구로 바꾸는 방안이 일정 부분 합의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경우, 광역시의 구의회가 폐지되고 구정장은 종전처럼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등 지방행정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관련 기사 3면〉

4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영택 의원(서구 갑)에 따르면 여야는

법안심사소위 활동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특위 활동 마감 기간인 이달 말까지 관련법 제·개정 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여야는 또 인구 과소구에 대해서는 적정 규모로 통합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시·군 개편 문제는 ▲4년 내 통합 완료를 목표로 전국 3분의 2 이상 시·군이 통합키로 했을 때 나머지 지역 통합을 통한 광역지방정부화를 2년

하는 1안 ▲자율 통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2안이 마련돼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중앙 차원에서 ‘행정체제개편추진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2014년까지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과 통합 기준 및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책 의총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당론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구의회 없어지나

자치구 → 행정구 변경 한나라·민주 의견점근

학교 완전 무상급식 ‘대세’

광주 2014년 초등 전면 시행...지방선거 후보 공약 잇따라

광주·전남에서도 각급 학교의 무상급식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목표교육청에 이어 광주시교육청이 단계별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정치권의 관련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일부 출마자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2010년 학교급식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고 2014년까지 초등학생 12만여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본보 1월 12일자 7면 보도〉

시교육청은 올해 121억원을 투입해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매년 한 학년씩 단계적으로 늘려 2014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지난달 26일 초·중학생에게 급식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2 지방 선거 출마자들이 무상급

식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광주시장 예비후보인 양형일 전 의원,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윤남실 진보신당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정 전 수석은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약속했다. 이정재·탁인석 등 광주시교육감 예비 후보들도 무상급식이 주요 선거 공약이다.

김장환·윤기선 전남도교육감 예비 후보도 이날 출마기자 회견을 통해 “전학생 무료급식 등 교육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기 영합성 공약이라는 지

적도 나오고 있다. 김영수 광주시교육감 예비 후보와 서기남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이 당장은 공짜로 보일지 몰라도 결국 주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되돌아가고, 다른 교육 사업이 뒤로 밀리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광주·전남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연간 광주 970억원, 전남 1천500억원 등 2천200억원이 필요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다란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광 부 108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오늘은 참 맑은 날입니다

POSCO